

정부, 본격 농번기 맞아 인력난 해소 총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 농촌인력증개 등 지원 강화 나서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인력증개와 일손돕기 지원도 강화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인력 수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숙소와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 시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 농번기인 4~6월과 9~10월의 농업 인력 수요는 전체의 61.6%인 16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인력과 국내 인력을 동시에 확대 공급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은 총 10만4000명 규모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계절근로자가 9만4000명, 고용허가제 인력이 1만 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1곳, 3087명 규모였던 사업은 올해 142곳, 5039명 규모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인력 수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숙소와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업을 대신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입국과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주요 출입국 관서에는 계절근로 전담팀이 운영되며, 외국인등록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 지원책도 확대된다. 농촌 인력증개센터 188개소를 통해 공급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일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정보 제공도 시작했다. 또 농협중앙회를 통한 기업·공공기관과 농촌 간 일손돕기 협약을 확대하고,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전국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에는 농식품부와 법무부, 지방정부, 농협 등이 참여하며 인력 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주단위로 점검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사과·복숭아·포도·배 등 과수와 마늘·고추·양파·배추·무·감자 등 주요 품목 생산지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장수가 포함됐다.

송미령 장관은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탄력'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국토교통부장관 겸임)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시행계획은 국가 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각각 승인하는 이원화 구조로 인해 행정 절차가 중복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중심인 전주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중심인 전주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생 해묵은 과제 해결

민주 윤준병 의원 발의 농어업 등 관련법안 14건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해결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민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자립 개정안(2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가능한 연구해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4건이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민집 정비법과 연계한 △민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윤 의원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농어촌의 해묵은 과제 해결은 물론 인구 위기 등 국가적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윤 의원의 폭넓은 의정 수행 능력과 정책적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미래산업·민생 안정 총력

도, 11~15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한국 미래소재 준공식 등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전북자치도가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민생 경제 지원, 그리고 도민 안전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전북도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보폭을 넓힌다. 오는 11일부터 CBS 2027 참가 기업 모집을 시작해 도내 혁신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군산에서 한국 미래소(주) 준공식이 열려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도 빨리간다. 도는 1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북의 문화·관광·

스포츠 역량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형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11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순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지 점검을 실시해 가맹점 이용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13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 지휘 아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TF' 회의를 열고 지급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14일에는 지역 경제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경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도는 15일부터 여름철 산사태 대책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전북자치도가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며, 오는 6월까지 이어지는 '2026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15일부터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돌려 줄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15일 전북 첨단산업 인프라 '질문의 원천'을 지적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원자력의학원 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받아야만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원팀으로 전북의 봄 열겠다"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중단 없는 진안 발전과 소멸되어 가는 진안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보자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3선 군수가 돼서 진안 발전, 소멸되어 가는 진안을 되살리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무주는 충청과 영남을 잇는 전략적 지역"이라며 "기초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희식 장수군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4선 전보다 젊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며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경선 과정의 갈등을 화합과 단결로 풀어내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는 "농어촌 기

본소득 시범군 선정은 순창의 새로운 기회라며 "햇빛연금과 협동조합 모델을 결합해 보편적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삼성전자 물류센터 유치 등 고창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재선에 성공해 주요 현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부안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실현할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군민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위원장은 "부안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실현할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군민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위원장은 "부안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실현할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군민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현군 살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문제 행

위인데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이를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이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거나 타당을 돕는 행위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며, 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향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지역위원회가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경쟁은 치열했지만 결과에는 승복하기로 약속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전북의 봄을 함께 만들겠다는 기대를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호남권 공천자대회를 오는 5월 12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당 원내부대표 임명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게 됐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원내 전략 수립과 주요 입법·정책 과제 조정, 메시지 대응, 국회 운영 전반의 협의·조율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박희승 의원은 "앞으로 1년이 이어질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개혁 과제가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 행정부지사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정 혁신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최우수상, 행정정보과 전북형 생생형 AI 직접 구축' 사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생생형 AI 직접 구축,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 유치, 주민 재산권 규제 개선 등 도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공직사회 혁신 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는 지난 8일 행정부지사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으로 도정 혁신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문제 해결과 행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본청과 소방, 출연기관 등에서 총 1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

며,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이 본선에서 경쟁을 펼쳤다. 최종 순위는 도민 온라인 투표(20%)와 본선 심사(80%)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행정정보과의 '50억짜리 청구서, 3억의 혁신으로 뒤집다' 광역 최초 '전북형 생생형 AI 직접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기업유치과의 '현대차그룹 새민금 9조원 투자협약 체결, 전북을 한국 로켓·AI·부수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 사례가 선정됐다.

도는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비롯해 특별휴가 3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